

기업체 안전관리자의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 정책방향 이해도에 관한 연구

김종인* · 최서연**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본부

**인하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A Study on the Comprehension of the Industri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Job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Safety Managers

Jong-In Kim* · Seo-Yeon Choi**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Dept. of Social & Preventive Medicine, Inh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prehen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job characteristics of the safety managers at 211 workplace selecte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firms, there was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 on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ir region, type, scale, and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Regarding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re was difference in the comprehen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ir age, experience and depart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policy as well as the awareness about safety by management and safety managers need to be changed by analyzing the comprehension of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 job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occupational safety managers.

Keyword: Safety Managers, Industrial Safety, Industrial Safety Policy Direction

1. 서론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 수가 472,329명(사망 11,662명),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직접 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16,814,806백만 원으로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84,074,030 백만 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1][2]

특히, 국내의 산업현장 중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분야의 산업재해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재해유형도 다양화·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기업에서 안전관리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인식은 팽배해 있지만 법적인 규제의 완화, 경영자·근로자의 인식부족, 작업환경에 개선에 따른 투자비용의 감소, 안전 불감증 등으로 안전관리 투자와 대책은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

† 교신저자: 최서연,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4동 인하대학교 2북 668A

Tel: 032-860-702, E-mail: welcom-news@hanmail.net

2012년 10월 20일 접수; 2012년 12월 11일 수정본 접수; 2012년 12월 13일 게재확정

국내의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1997년 5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안전 관리자 의무고용 축소 및 안전 관리자 겸임 확대 등 안전관리 제도가 대폭적으로 완화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변화를 가져왔다.[5]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선임된 안전 관리자는 11,011개소(48.6%)이며, 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은 11,625개소(51.4%)로 사업장 자체선임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5]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으나 비제조업 부문에서도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자들이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되어 있으나 총무부서, 공무부서 등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안전업무의 전문성과 법령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안전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안전 관리자 선임·자격, 직무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체 안전관리자의 실태 및 산업안전정책 방향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안전관리자의 직무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 정책 방향 이해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 안전관리 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설문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집락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기업체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2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235명 이었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회수하지 못한 24명을 제외한 21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조사도구는 기업체 특성, 안전관리자의 특성, 산업안전정책방향의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업체 특성은 지역, 업종, 회사규모, 노조설립여부의 4문항, 안전관리자의 직무 특성은 연령, 안전관리 업무 전담 여부, 직위, 안전 관리자 경력, 근무 부서의 5문항, 산업안전정책방향은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의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 수령 여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의 지

도·점검 유무, 자율적인 사고 예방 관리에 대한 인식도의 4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 통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기업체 특성, 연구대상자의 근무 환경 특성,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인식도는 n과 %를 이용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분야별 자격증 보유 현황은 다중응답 분석(Multiple Response)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업체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 방향 차이, 안전관리자의 근무환경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 방향 차이는 χ^2 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3.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기업체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근무 기업체 특성은 <Table 1>와 같다.

<Table 1> 연구대상자의 기업체 특성

기업체 특성		n	%
지역	서울청	53	25.1
	중부청	71	33.6
	대전청	26	12.3
	광주청	22	10.4
	부산청	11	5.2
	대구청	28	13.3
업종	제조업	135	64.0
	전기, 가스 및 수도업	12	5.7
	서비스	16	7.6
	운수, 창고, 통신업	27	12.8
회사 규모	기타	21	10.0
	99명 이하	54	25.6
	100~299명	84	39.8
	300명~499명	25	11.8
	500명~999명	10	4.7
노조설립 여부	1000명 이상	38	18.0
	예	147	69.7
	아니오	64	30.3
Total		211	100.0

지역별로는 고용노동부의 6개청 단위별로 서울청 53명(25.1%), 중부청 71명(33.6%), 대전청 26명(12.3%), 광주청 22명(10.4%), 부산청 11명(5.2%), 대구청 28명(13.3%)으로 중부청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35명(64.0%), 전기, 가스, 수도업 12명(5.7%),

서비스업 16명(7.6%), 운수업, 창고, 통신업 27명(12.8%), 기타 21명(10.0%) 순으로 제조업의 참여가 가장 많았다. 회사규모는 99명 이하 54명(25.6%), 100명 이상 299명 이하 84명(39.8%), 300명 이상 499명 이하 25명(11.8%), 500명 이상 999명 이하 10명(4.7%), 1000명 이상 38명(18.05)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조설립 여부는 ‘예’ 147명(69.7%), ‘아니오’ 64명(30.3%)으로 나타났다.

3.2 연구대상자의 직무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령별로는 21~30세 53명(25.1%), 31~40세 73명(34.6%), 41~50세 57명(27.0%), 51세 이상 28명(13.3%)으로 31~40세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보유 자격증은

산업안전지도사 3명(1.4%), 산업안전기사 131명(62.1%), 산업안전산업기사 52명(24.6%), 4년제 대학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 6명(2.8%), 기타 19명(9.0%) 순으로 산업안전기사 보유가 가장 많았다. 안전관리 경력으로는 1년 미만 47명(22.3%), 1~3년 미만 36명(17.1%), 3~5년 미만 48명(22.7%), 10~20년 미만 55명(26.1%), 20년 이상 25명(11.8%)으로 나타났으며, 근무부서로는 총무팀 34명(16.1%), 환경안전팀 84명(39.8%), 시설팀, 공무팀 40명(19.0%), 생산팀 11명(5.2%), 품질부서 3명(1.4%), 기타 39명(18.5%) 순으로 환경안전팀으로 가장 많았다. 연봉으로는 3000만원 미만 55명(26.1%), 3000~4000만원 미만 48명(22.7%), 4000~5000만원 미만 53명(25.1%), 5000~6000만원 미만 30명(14.2%), 6000만원 이상 25명(11.8%)으로 나타났다.

<Table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n	%
연령	21~30세	53	25.1
	31~40세	73	34.6
	41~50세	57	27.0
	51세 이상	28	13.3
보유 자격증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지도사	3	1.4
	산업안전기사	131	62.1
	산업안전산업기사	52	24.6
	4년제 대학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	6	2.8
	기타	19	9.0
안전관리 업무 전담 여부	자체선임(전담)	96	45.5
	자체선임(겸직)	115	54.5
직위	사원	75	35.5
	대리~과장	75	35.5
	차장	38	18.0
	팀장 또는 부장	17	8.1
	기타	6	2.8
안전경력	1년 미만	47	22.3
	1~3년 미만	36	17.1
	3~5년 미만	48	22.7
	10~20년 미만	55	26.1
	20년 이상	25	11.8
근무부서	총무부	34	16.1
	환경안전팀	84	39.8
	시설팀, 공무팀	40	19.0
	생산팀	11	5.2
	품질부서	3	1.4
	기타	39	18.5
연봉	3000만원 미만	55	26.1
	3000~4000만원 미만	48	22.7
	4000~5000만원 미만	53	25.1
	5000~6000만원 미만	30	14.2
	6000만원 이상	25	11.8
Total		211	100.0

3.3 연구 대상자의 분야별 자격증 보유 현황

연구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의 분류는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를 토대로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Table 3>와 같이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가 191명(51.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계분야 55명(14.9%), 전기분야 43명(11.7%), 가스분야 38명(10.3%), 화공분야 20명(5.4%), 환경분야 13명(3.5%), 보건분야 8명(2.2%)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안전 관리자는 화공, 환경, 보건 분야에 전문 자격분야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연구대상자의 분야별 자격증 보유 현황

분야별 자격증	응답	
	n	%
기계분야	55	14.9
전기분야	43	11.7
화공분야	20	5.4
가스분야	38	10.3
안전관리	191	51.9
환경분야	13	3.5
보건분야	8	2.2
Total	368	100.0

Multiple Response

3.4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인식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인식도는 <Table 4>와 같다.

사업주가 산업안전 정책방향을 이해 및 안전보건조치 수행여부는 ‘예’ 150명(71.1%), ‘아니오’ 64명(30.3%), 산업재해예방 정책에 대한 홍보 안내 및 유인물 수령여부는 ‘예’ 171명(81.0%), ‘아니오’ 40명(19.0%)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09~2011년) 지방관서로부터 지도·점검 경험 여부는 ‘예’ 113명(53.6%), ‘아니오’ 98명(46.4%)라고 응답하였으며, 지도·점검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망 또는 산업재해발생으로 점검을 받은 경우 22명(10.4%),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한 경우 2명(0.9%), 산업재해 은폐로 고발당하는 경우 9명(4.3%), 근로감독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는 경우 71명(33.6%), 기타 8명(3.8%)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없이도 사업장 스스로 사고나 직업병 예방 여부는 ‘예’ 155명(73.5%), ‘아니오’ 55명(26.5%)으로 나타났다.

<Table 4>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인식도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인식도		n	%
사업주가 산업안전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안전보건조치 수행	예	150	71.1
	아니오	61	28.9
홍보안내 및 유인물	예	171	81.0
	아니오	40	19.0
지도점검·경험유무 (2009년~2011년)	있다	113	53.6
	없다	98	46.4
지도·점검 받은 이유	사망 또는 산업재해발생으로 점검을 받는 경우	22	10.4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한 경우	2	.9
	산업재해 은폐로 고발당하는 경우	9	4.3
	근로감독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는 경우	71	33.6
	기타	8	3.8
지도·점검 없이도 사업장 스스로 사고나 직업병 예방	예	155	73.5
	아니오	56	26.5
Total		211	100.0

3.5 기업체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 방향 차이

3.5.1 기업체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

기업체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는 <Table 5>와 같이 지역, 업종, 회사규모, 노조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 84명(62.2%), 전기, 가스 및 수도업 12명(100.0%), 서비스업

11명(68.8%), 운수, 창고, 통신업 26명(96.3%), 기타 17명(81.0%)으로 전기, 가스 및 수도업과 운수, 창고, 통신업의 산업안전정책 방향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chi^2=19.429, p<0.01$), 회사규모의 경우 종업원 수가 99명 이하일 경우 28명(51.9%), 100~299명 55명(65.5%), 300~499명 21명(84.0%), 500명~999명 10명(100.0%), 1000명 이상 36명(94.7%)으로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7.445, p<0.001$).

<Table 5> 기업체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

기업체 특성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Total	χ^2 (df)
		예	아니오		
지역	서울청	44(83.0)	9(17.0)	53(100.0)	5.759 (5)
	충부청	46(64.8)	25(35.2)	71(100.0)	
	대전청	18(69.2)	8(30.8)	26(100.0)	
	광주청	16(72.7)	6(27.3)	22(100.0)	
	부산청	8(72.7)	3(27.3)	11(100.0)	
업종	대구청	18(64.3)	10(35.7)	28(100.0)	19.429** (4)
	제조업	84(62.2)	51(37.8)	135(100.0)	
	전기·가스 및 수도업	12(100.0)	-	12(100.0)	
	서비스업	11(68.8)	5(31.3)	16(100.0)	
	운수,창고,통신업	26(96.3)	1(3.7)	27(100.0)	
회사규모	기타	17(81.0)	4(19.0)	21(100.0)	27.445*** (4)
	99명 이하	28(51.9)	26(48.1)	54(100.0)	
	100~299명	55(65.5)	29(34.5)	84(100.0)	
	300명~499명	21(84.0)	4(16.0)	25(100.0)	
	500명~999명	10(100.0)	-	10(100.0)	
노조설립	1000명 이상	36(94.7)	2(5.3)	38(100.0)	0.028 (1)
	예	104(70.7)	43(29.3)	147(100.0)	
Total		150(71.1)	61(28.9)	211(100.0)	

Chi-square Test, **p<0.01, ***p<0.001

3.5.2 기업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의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 수령 여부 차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의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 수령 여부는 <Table 6>과 같이 지역, 업종, 회사규모, 노조설립여부에 관계없이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 차이는 제조업 114명(84.4%), 전기·가스, 수도업 12명(100%), 서비스업 10

명(62.5%), 운수,창고,통신업 25명(92.6%), 기타 10명(47.6%)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의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25.019$, $p<0.001$), 노조 설립 여부에 따른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 수령 여부는 노조 설립이 되어 있는 경우 139명(92.5%)로 정보에 대한 자료 확보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41.532$, $p<0.001$).

<Table 6>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의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에 대한 차이

기업체 특성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의 홍보안내 및 유인물 정보		Total	χ^2 (df)
		예	아니오		
지역	서울청	40(75.5)	13(24.5)	53(100.0)	3.321 (5)
	충부청	58(81.7)	13(18.3)	71(100.0)	
	대전청	20(76.9)	6(23.1)	26(100.0)	
	광주청	18(81.8)	4(18.2)	22(100.0)	
	부산청	10(90.9)	1(9.1)	11(100.0)	
업종	대구청	25(89.3)	3(10.7)	28(100.0)	25.019*** (4)
	제조업	114(84.4)	21(15.6)	135(100.0)	
	전기·가스 및 수도업	12(100.0)	-	12(100.0)	
	서비스업	10(62.5)	6(37.5)	16(100.0)	
	운수,창고,통신업	25(92.6)	2(7.4)	27(100.0)	
회사규모	기타	10(47.6)	11(52.4)	21(100.0)	3.049 (4)
	99명 이하	42(77.8)	12(22.2)	54(100.0)	
	100~299명	67(79.8)	17(20.2)	84(100.0)	
	300명~499명	23(92.0)	2(8.0)	25(100.0)	
	500명~999명	9(90.0)	1(10.0)	10(100.0)	
노조설립	1000명 이상	30(78.9)	8(21.1)	38(100.0)	41.532*** (1)
	예	136(92.5)	11(7.5)	147(100.0)	
Total		171(81.0)	40(19.0)	211(100.0)	

Chi-square Test, ***p<0.001

3.5.3 기업체 특성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의 지도·점검 유무 차이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로부터 지도·점검 경험 유무에 대한 차이는 <Table 7>과 같다. 지역별로는 부산권 7명(63.6%), 대구권 19명(67.95)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미하여 지도·점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91명(67.4%), 전기·가스, 수도업 4명(33.3%), 서비스업 6명(37.5%), 운수, 창고, 통신업 7명(25.9%), 기타 5명(23.8%)으로 제조업의 지도·점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9.802, p<0.001$). 회사규모의 경우 99명 이하일 경우 33명(61.1%), 100~299명 47명(56.0%), 300~499명 16명(64.0%), 500명~999명 7명(70.0%), 1000명 이상 10명(26.3%)으로 1000명 이하의 종원 수를 가진 기업의 경우 지도·점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4.953, p<0.01$), 노조 설립 여부와 관련 노조설립이 되어 있는 경우 85명(57.8%), 노조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8명(43.8%)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지도·점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550, p<0.05$).

<Table 7> 기업체 특성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의 지도·점검 유무 차이

기업체 특성		정책방향		Total	χ^2 (df)
		있다	없다		
지역	서울청	22(41.5)	31(58.5)	53(100.0)	6.177 (5)
	충부청	40(56.3)	31(43.7)	71(100.0)	
	대전청	14(53.8)	12(46.2)	26(100.0)	
	광주청	11(50.0)	11(50.0)	22(100.0)	
	부산청	7(63.6)	4(36.4)	11(100.0)	
	대구청	19(67.9)	9(32.1)	28(100.0)	
업종	제조업	91(67.4)	44(32.6)	135(100.0)	29.802*** (4)
	전기·가스 및 수도업	4(33.3)	8(66.7)	12(100.0)	
	서비스업	6(37.5)	10(62.5)	16(100.0)	
	운수, 창고, 통신업	7(25.9)	20(74.1)	27(100.0)	
	기타	5(23.8)	16(76.2)	21(100.0)	
회사규모	99명 이하	33(61.1)	21(38.9)	54(100.0)	14.953** (4)
	100~299명	47(56.0)	37(44.0)	84(100.0)	
	300명~499명	16(64.0)	9(36.0)	25(100.0)	
	500명~999명	7(70.0)	3(30.0)	10(100.0)	
	1000명 이상	10(26.3)	28(73.7)	38(100.0)	
노조설립	예	85(57.8)	62(42.2)	147(100.0)	3.550* (1)
	아니오	28(43.8)	36(56.3)	64(100.0)	
Total		113(53.6)	98(46.4)	211(100.0)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3.5.4. 기업체 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사고 예방 관리에 대한 인식도 차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부터 지도·점검이 없어도 기업체에서 자율적인 사고예방에 대한 관리의 인식도 차이는 <Table 8>과 같이 지역, 업종, 회사규모, 노조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자율적 관리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7명(64.4%), 전기·가스, 수도업 12명(100%), 서비스업 13명(81.3%),

운수, 창고, 통신업 26명(96.3%), 기타 17명(81.0%)으로 기업체에서 자율적인 사고예방에 대한 관리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chi^2=18.288, p<0.01$), 회사규모의 경우 99명 이하일 경우 27명(50.0%), 100~299명 62명(73.8%), 300~499명 20명(80.0%), 500명~999명 10명(100.0%), 1000명 이상 36명(94.7%)으로 회사규모가 클수록 기업체에서 자율적인 사고예방에 대한 관리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chi^2=28.234, p<0.001$).

<Table 8> 기업체 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사고 예방 관리에 대한 인식도 차이

기업체 특성		정책방향		Total	$\chi^2(df)$
		예	아니오		
지역	서울청	46(86.8)	7(13.2)	53(100.0)	10.231 (5)
	중부청	48(67.6)	23(32.4)	71(100.0)	
	대전청	20(76.9)	6(23.1)	26(100.0)	
	광주청	17(77.3)	5(22.7)	22(100.0)	
	부산청	8(72.7)	3(27.3)	11(100.0)	
	대구청	16(57.1)	12(42.9)	28(100.0)	
업종	제조업	87(64.4)	48(35.6)	135(100.0)	18.288** (4)
	전기·가스 및 수도업	12(100.0)	-	12(100.0)	
	서비스업	13(81.3)	3(18.8)	16(100.0)	
	운수,창고,통신업	26(96.3)	1(3.7)	27(100.0)	
		17(81.0)	4(19.0)	21(100.0)	
회사규모	99명 이하	27(50.0)	27(50.0)	54(100.0)	28.234*** (4)
	100~299명	62(73.8)	22(26.2)	84(100.0)	
	300명~499명	20(80.0)	5(20.0)	25(100.0)	
	500명~999명	10(100.0)	-	10(100.0)	
	1000명 이상	36(94.7)	2(5.3)	38(100.0)	
노조설립	예	109(74.1)	38(25.9)	147(100.0)	0.188 (1)
	아니오	46(71.9)	18(28.1)	64(100.0)	
Total		155(73.5)	56(26.5)	211(100.0)	

Chi-square Test, **p<0.01, ***p<0.001

3.6 안전관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업 안전정책 방향 차이

3.6.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인 안전관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는 <Table 9>와 같다.

연령별로는 21~30세 31명(58.5%), 31~40세 43명(58.9%), 41~50세 52명(91.2%), 51세 이상 24명(85.7%)

으로 41~50세 이상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23.529$, $p<0.001$), 안전관리자 전담은 74명(77.1%), 겸직은 76명(66.1%)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경력으로는 1년 미만 36명(76.6%), 1~3년 미만 20명(55.6%), 3~5년 미만 26명(54.2%), 10~20년 미만 45명(81.8%), 20년 이상 23명(92.0%)으로 나타났다. ($\chi^2=20.008$, $p<0.001$) 또한 근무 부서로는 총무팀 23명(67.6%), 환경안전팀 50명(59.5%), 시설팀, 공무팀 31명(77.5%), 생산팀 9명(81.8%), 품질부서 1명(33.3%), 기타 36명(92.3%) 순으로 환경안전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17.703$, $p<0.01$).

<Table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

기업체 특성		정책방향		Total	χ ² (df)
		예	아니오		
연령	21~30세	31(58.5)	22(41.5)	53(100.0)	23.529*** (3)
	31~40세	43(58.9)	30(41.1)	73(100.0)	
	41~50세	52(91.2)	5(8.8)	57(100.0)	
	51세 이상	24(85.7)	4(14.3)	28(100.0)	
선임	자체선임(전담)	74(77.1)	22(22.9)	96(100.0)	3.078 (1)
	자체선임(겸직)	76(66.1)	39(33.9)	115(100.0)	
직위	사원	56(74.7)	19(25.3)	75(100.0)	6.189 (4)
	대리~과장	46(61.3)	29(38.7)	75(100.0)	
	차장	30(78.9)	8(21.1)	38(100.0)	
	팀장 또는 부장	14(82.4)	3(17.6)	17(100.0)	
	기타	4(66.7)	2(33.3)	6(100.0)	
안전경력	1년 미만	36(76.6)	11(23.4)	47(100.0)	20.008*** (4)
	1~3년 미만	20(55.6)	16(44.4)	36(100.0)	
	3~5년 미만	26(54.2)	22(45.8)	48(100.0)	
	10~20년 미만	45(81.8)	10(18.2)	55(100.0)	
	20년 이상	23(92.0)	2(8.0)	25(100.0)	
소속부서	총무부	23(67.6)	11(32.4)	34(100.0)	17.703** (5)
	환경안전팀	50(59.5)	34(40.5)	84(100.0)	
	시설팀, 공무팀	31(77.5)	9(22.5)	40(100.0)	
	생산팀	9(81.8)	2(18.2)	11(100.0)	
	품질부서	1(33.3)	2(66.7)	3(100.0)	
	기타	36(92.3)	3(7.7)	39(100.0)	
Total		150(71.1)	61(28.9)	211(100.0)	

Chi-square Test, **p<0.01, ***p<0.001

3.6.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에 대한 홍보안내 및 유인물 활용 이해도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방향에 대한 홍보안내 및 유인물 활용 이해도는 <Table 10>와 같다.

연령별로는 21~30세 39명(73.6%), 31~40세 59명(80.8%), 41~50세 50명(87.7%), 51세 이상 23명(82.1%)으로 31~40세 이상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

자 전담은 86명(89.6%), 겸직은 85명(73.9%)으로 나타났다(χ²=8.363, p<0.01), 안전경력으로는 1년 미만 32명(68.1%), 1~3년 미만 27명(75.0%), 3~5년 미만 40명(83.3%), 10~20년 미만 50명(90.9%), 20년 이상 22명(88.0%)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부서로는 총무팀 24명(70.6%), 환경안전팀 74명(88.1%), 시설팀, 공무팀 34명(85.0%), 생산팀 7명(63.6%), 품질부서 2명(66.7%), 기타 30명(76.9%) 순으로 환경안전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χ²=21.705, p<0.001).

<Table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방향에 대한 홍보안내 및 유인물 활용 이해도

기업체 특성		정책방향		Total	χ^2 (df)
		예	아니오		
연령	21~30세	39(73.6)	14(26.4)	53(100.0)	3.597 (1)
	31~40세	59(80.8)	14(19.2)	73(100.0)	
	41~50세	50(87.7)	7(12.3)	57(100.0)	
	51세 이상	23(82.1)	5(17.9)	28(100.0)	
선임	자체선임(전담)	86(89.6)	10(10.4)	96(100.0)	8.363** (1)
	자체선임(겸직)	85(73.9)	30(26.1)	115(100.0)	
직위	사원	52(69.3)	23(30.7)	75(100.0)	21.705*** (4)
	대리~과장	66(88.0)	9(12.0)	75(100.0)	
	차장	38(100.0)	-	38(100.0)	
	팀장 또는 부장	11(64.7)	6(35.3)	17(100.0)	
	기타	4(66.7)	2(33.3)	6(100.0)	
안전경력	1년 미만	32(68.1)	15(31.9)	47(100.0)	10.428* (4)
	1~3년 미만	27(75.0)	9(25.0)	36(100.0)	
	3~5년 미만	40(83.3)	8(16.7)	48(100.0)	
	10~20년 미만	50(90.9)	5(9.1)	55(100.0)	
	20년 이상	22(88.0)	3(12.0)	25(100.0)	
소속부서	총무부	24(70.6)	10(29.4)	34(100.0)	8.500 (5)
	환경안전팀	74(88.1)	10(11.9)	84(100.0)	
	시설팀, 공무팀	34(85.0)	6(15.0)	40(100.0)	
	생산팀	7(63.6)	4(36.4)	11(100.0)	
	품질부서	2(66.7)	1(33.3)	3(100.0)	
	기타	30(76.9)	9(23.1)	39(100.0)	
Total		171(81.0)	40(19.0)	211(100.0)	

Chi-square Test, *p<0.05, **p<0.01, ***p<0.001

3.6.3. 일반적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로부터 지도·점검에 대한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로부터 지도·점검에 대한 차이는 <Table 11>과 같다.

연령별로는 21~30세 30명(56.6%), 31~40세 45명(61.6%), 41~50세 23명(40.4%), 51세 이상 15명(53.6%)으로 31~40세 이상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안전경력

으로는 1년 미만 14명(29.8%), 1~3년 미만 26명(72.2%), 3~5년 미만 32명(66.7%), 10~20년 미만 32명(58.2%), 20년 이상 9명(36.0%)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부서로는 총무팀 16명(47.1%), 환경안전팀 54명(64.3%), 시설팀, 공무팀 20명(50.0%), 생산팀 8명(72.7%), 품질부서 2명(66.7%), 기타 13명(33.3%) 순으로 환경안전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chi^2=22.606, p<0.001$)

<Table 11> 일반적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로부터 지도·점검에 대한 차이

기업체 특성		정책방향		Total	χ ² (df)
		있다	없다		
연령	21~30세	30(56.6)	23(43.4)	53(100.0)	6.114 (3)
	31~40세	45(61.6)	28(38.4)	73(100.0)	
	41~50세	23(40.4)	34(59.6)	57(100.0)	
	51세 이상	15(53.6)	13(46.4)	28(100.0)	
직위	사원	36(48.0)	39(52.0)	75(100.0)	9.744* (4)
	대리~과장	44(58.7)	31(41.3)	75(100.0)	
	차장	22(57.9)	16(42.1)	38(100.0)	
	팀장 또는 부장	11(64.7)	6(35.3)	17(100.0)	
	기타	-	6(100.0)	6(100.0)	
안전경력	1년 미만	14(29.8)	33(70.2)	47(100.0)	22.606*** (4)
	1~3년 미만	26(72.2)	10(27.8)	36(100.0)	
	3~5년 미만	32(66.7)	16(33.3)	48(100.0)	
	10~20년 미만	32(58.2)	23(41.8)	55(100.0)	
	20년 이상	9(36.0)	16(64.0)	25(100.0)	
소속부서	총무부	16(47.1)	18(52.9)	34(100.0)	12.913* (5)
	환경안전팀	54(64.3)	30(35.7)	84(100.0)	
	시설팀, 공무팀	20(50.0)	20(50.0)	40(100.0)	
	생산팀	8(72.7)	3(27.3)	11(100.0)	
	품질부서	2(66.7)	1(33.3)	3(100.0)	
	기타	13(33.3)	26(66.7)	39(100.0)	
Total		113(53.6)	98(46.4)	211(100.0)	

Chi-square Test, *p<0.05, ***p<0.001

3.6.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로부터 지도 점검이 없어도 사업장에서 스스로 사고나 직업병 예방 가능 여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로부터 지도·점검이 없어도 사업장에서 스스로 사고나 직업병 예방에 대한 차이는 <Table 12>와 같다.

연령별로는 21~30세 28명(52.8%), 31~40세 51명(69.9%), 41~50세 51명(89.5%), 51세 이상 25명(89.3%)

으로 31~40세, 41~50세 이상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χ²=23.148, p<0.001), 안전경력으로는 1년 미만 38명(80.9%), 1~3년 미만 18명(50.0%), 3~5년 미만 32명(66.7%), 10~20년 미만 43명(78.2%), 20년 이상 24명(96.0%)으로 나타났다(χ²=19.759, p<0.01). 또한 근무부서로는 총무팀 23명(67.6%), 환경안전팀 57명(67.9%), 시설팀, 공무팀 29명(72.5%), 생산팀 10명(90.9%), 품질부서 1명(33.3%), 기타 35명(89.7%) 순으로 환경안전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로부터 지도 · 점검이 없어도 사업장에서 스스로 사고나 직업병 예방 가능 여부

기업체 특성		정책방향		Total	χ ² (df)
		예	아니오		
연령	21~30세	28(52.8)	25(47.2)	53(100.0)	23.148*** (3)
	31~40세	51(69.9)	22(30.1)	73(100.0)	
	41~50세	51(89.5)	6(10.5)	57(100.0)	
	51세 이상	25(89.3)	3(10.7)	28(100.0)	
직위	사원	54(72.0)	21(28.0)	75(100.0)	5.409 (4)
	대리~과장	51(68.0)	24(32.0)	75(100.0)	
	차장	29(76.3)	9(23.7)	38(100.0)	
	팀장 또는 부장	16(94.1)	1(5.9)	17(100.0)	
	기타	5(83.3)	1(16.7)	6(100.0)	
안전경력	1년 미만	38(80.9)	9(19.1)	47(100.0)	19.759** (4)
	1~3년 미만	18(50.0)	18(50.0)	36(100.0)	
	3~5년 미만	32(66.7)	16(33.3)	48(100.0)	
	10~20년 미만	43(78.2)	12(21.8)	55(100.0)	
	20년 이상	24(96.0)	1(4.0)	25(100.0)	
소속부서	총무부	23(67.6)	11(32.4)	34(100.0)	11.460* (5)
	환경안전팀	57(67.9)	27(32.1)	84(100.0)	
	시설팀, 공무팀	29(72.5)	11(27.5)	40(100.0)	
	생산팀	10(90.9)	1(9.1)	11(100.0)	
	품질부서	1(33.3)	2(66.7)	3(100.0)	
	기타	35(89.7)	4(10.3)	39(100.0)	
Total		155(73.5)	56(26.5)	211(100.0)	

Chi-square Test, *p<0.05, **p<0.01, ***p<0.001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에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체 특성에 따른 정부의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는 지역, 업종, 규모, 노조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제조업 62.2%로 다른 업종보다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기업체의 산업안전 관리자는 안전관리분야가 51.9%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화공, 보건, 환경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산업현장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기술력과 폭 넓은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기업체의 선임된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담이 45.5%, 겸직이 54.5%로 조사되었으며, 겸직인 경우에는 타 부서의 소속되어 겸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종, 규모에 따라서도 산업안전정책방향의 이해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참고 문헌

-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2012.
- [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2006~2010.
- [3] 갈원모, 김종배, 남현우, 최상복(2001). 안전관리자 직무분석과 효율적 교과목 선정에 관한 연구. 안전경영과학회지. 3(3). pp33-44.
- [4] 권영국(2000), 한국산업안전관리자의 실태조사와 비교연구, 안전경영과학회지. 2(3). pp89-100.
- [5] 김현영, 장승희, 고병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자격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 [6] 백종배외, 위험요인자기관리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 [7] 장석진(2010), 제조업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 [8] 전용일 외,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수요예측 및 서비스 전달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연구,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2010.
- [9] 전원일 외, 산업재해와 근로손실 분석, 국경제연구, 2011.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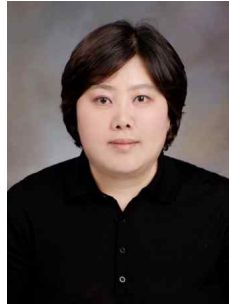
김종인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 졸업,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박사 취득. 현재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본부 차장 재직 중. 관심분야는 산업안전 정책, 기계 안전, 인간공학, 위험성평가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신명스카이뷰트림 아파트 104동 402호

최서연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사,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 취득. 현재 인하대학교 의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산업보건, 인간공학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동 인하대학교 2북 668A